KEF 경총
KOREA
ENTERPRISES
FEDERATION

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

2021. 6.

< 조사개요 >

※ 「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」는 한국경영자총협회(회장 손경식)가 전국 50인 이상 기업 322개사(응답 기업 기준)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 ㈜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임.

< 요 약 >

1 [규제혁신 만족도] 현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는 100점 만점에 '49.8점'

- 현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에 대해 응답 기업의 68.0%는 '보통'으로 평가했으며, '불만족'(15.2%)으로 평가한 기업이 '만족'(14.3%) 응답보다 0.9%p 높게 나타남.
- 응답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49.8점으로 현장의 만족도는 높지 않음.

2 [규제혁신 성과 비교] 규제혁신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시기에 대해 응답 기업의 70.8%는 '정부별 큰 차이가 없다'고 평가

- 역대 정부가 규제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부별 규제혁신 성과는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

3 [개선이 시급한 규제] 우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규제 분야로 중대재해처벌법, 주52시간제 같은 '노동 규제'(46.3%)를 가장 높게 응답

- 그 밖에 '세제 관련 규제(높은 상속세 및 법인세)'(23.9%), '환경 규제'(11.5%) 순으로 집계
- 특히 '노동 규제'와 '세제 관련 규제'는 300인 미만 기업의 응답률이 3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높게 조사됨.

  [노동 규제] 300인 미만 기업 48.5% > 300인 이상 기업 42.9%
  [세제 관련 규제] 300인 미만 기업 26.5% > 300인 이상 기업 19.8%

4 [규제개선 제도 인지도] 규제개선 제도 중 「규제개혁 신문고」 인지도가 34.5%로 가장 높게 조사됨.

- 제도별로 알고 있다는 응답(복수응답 허용)은 '규제비용관리제'(14.3%), '규제 샌드박스'(13.4%), '적극행정센터'(12.4%), '포괄적 네거티브제'(10.6%), '규제입증책임제'(10.6%), '규제영향분석제'(9.3%), '규제일몰제'(8.1%) 등 순으로 집계
- 한편 다양한 규제개선 제도에 대하여 '제도를 모른다'는 응답 기업도 34.2%에 달하여 규제개선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풀이됨.

5 [제도 효과성 평가 및 활용 의향] 규제개선 제도 중 「규제개혁 신문고」를 가장 효과적(26.1%)이라고 평가했으며, 향후 활용 의향이 있는 제도 역시 「규제개혁 신문고」(28.6%)를 가장 높게 응답

- 그 밖에 효과적인 제도는 '규제비용관리제'(13.7%), '적극행정센터'(12.9%), '규제 샌드박스'(8.3%), '규제영향분석제'(6.5%) 순으로 집계
- 다만 제시된 제도 중 '효과적인 제도가 없다'는 응답이 20.1%, '활용할 의향이 있는 제도가 없다'는 응답이 31.1%에 달하여 규제개선 제도별 효용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됨.

6 [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] 규제개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로 응답 기업의 69.9%는 '기업의 규제 애로 개선 요청시 피드백 및 사후관리 강화'를 지목

- 그 밖에 '의원 입법 발의시 규제심사 절차 마련'(11.2%), '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신설'(7.8%), '규제총량제 도입'(5.3%) 순으로 조사됨.

7 [규제환경 전망] 기업을 둘러싼 규제환경은 '개선되지 않을 것'이라는 전망이 77.3%에 달해

- 기업을 둘러싼 규제환경이 '지금보다 개선될 것'으로 전망한 기업은 22.7%에 불과한 반면 '개선되지 않을 것'으로 전망한 기업은 77.3%*로 향후 개선 가능성을 낮게 전망

  * 향후 규제환경 전망 : 지금과 유사(55.9%)하거나 악화(21.4%)

8 [규제환경 악화 요인] 향후 규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'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부족'(32.0%)을 가장 높게 응답

- 그 다음으로 '선거 전 포퓰리즘에 따른 규제 강화'(22.0%), '국회 입법규제 견제 장치(심사 · 분석) 미비'(20.0%), '반기업 정서 심화'(20.0%) 순으로 집계

1 현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는 100점 만점에 "49.8점"

□ 한국경영자총협회(회장 손경식)가 322개사를 대상으로 「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」를 실시한 결과, 응답 기업들은 현 정부의 규제혁신 만족도에 대하여 100점 만점에 "49.8점"으로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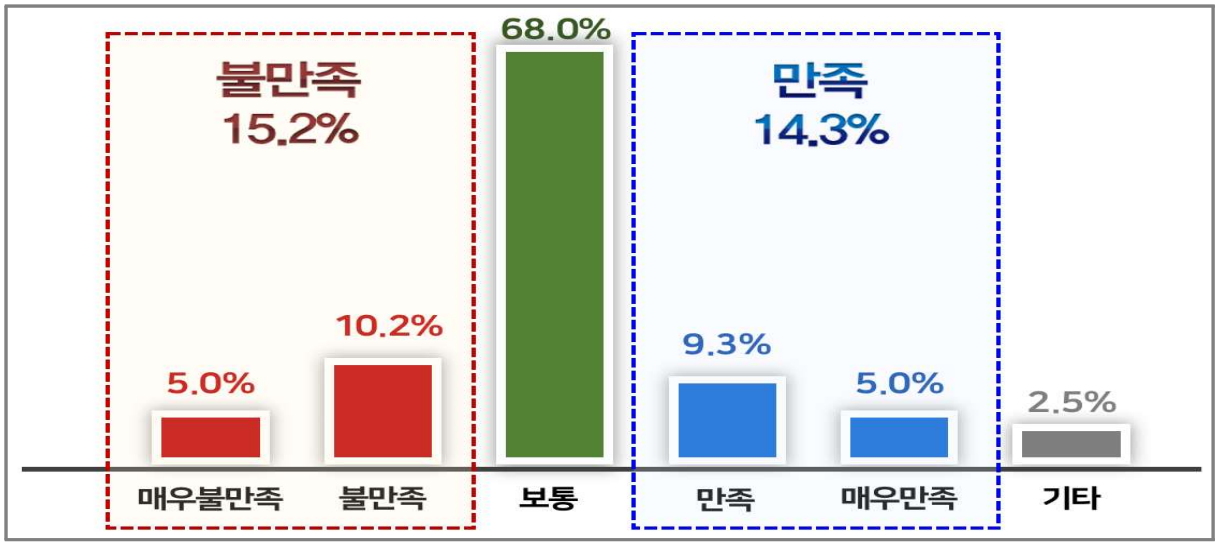
○ 현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에 대해 응답 기업의 68.0%는 '보통'으로 평가했으며, '불만족'(15.2%)으로 평가한 기업이 '만족'(14.3%) 응답보다 0.9%p 높게 나타남.

○ 규제혁신 만족도* 응답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49.8점으로 집계됨.

* 현장의 규제개선에 대해 기업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수치
< 산출식 : (매우만족 비율×100) + (만족 비율×75) + (보통 비율×50) + (불만족 비율×25) + (매우불만족 비율×0) >

○ 현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 샌드박스(2019.1월), 규제입증책임 전환(2019.3월) 등 규제개선 제도를 도입하였으나,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 현장의 만족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풀이됨.

[그림 1. 현 정부의 규제혁신 만족도]



※ 기타는 '모른다' 응답 비율로 점수 환산시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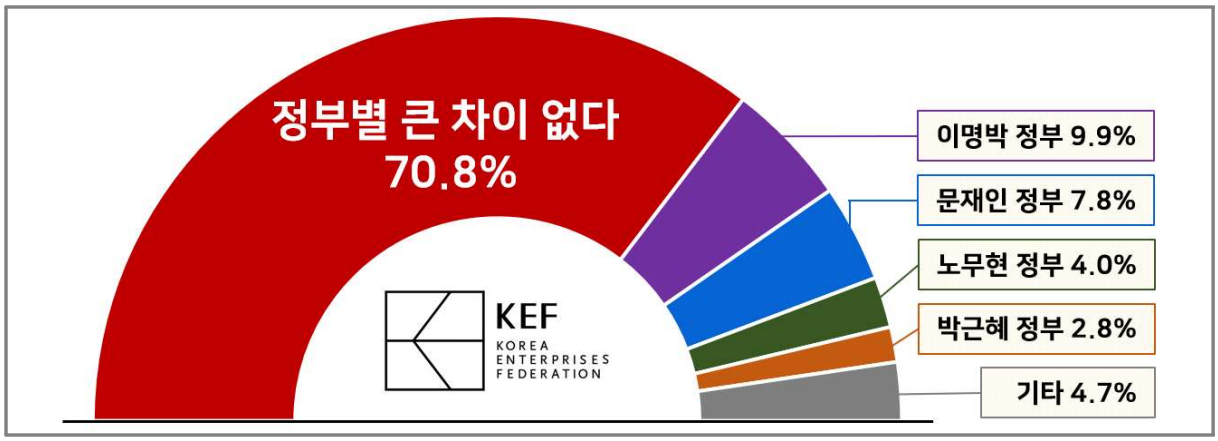
2 규제혁신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시기에 대해 정부별 큰 차이 없다는 응답이 70.8%로 가장 높아

□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비교적 가장 좋았던 시기에 대해 응답 기업 10곳 중 7곳(70.8%)은 '정부별 큰 차이 없다'고 평가

○ 그 다음으로 '이명박 정부'(9.9%), '문재인 정부'(7.8%), '노무현 정부'(4.0%), '박근혜 정부'(2.8%) 순으로 집계

○ 이러한 결과는 역대 정부가 규제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,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부별 규제혁신 성과는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됨.

[그림 2.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시기]



구 분	전 체	300인 이상	300인 미만
정부별 큰 차이 없다	70.8 %	73.0 %	69.4 %
이명박 정부	9.9 %	11.9 %	8.7 %
문재인 정부	7.8 %	7.1 %	8.2 %
노무현 정부	4.0 %	3.2 %	4.6 %
박근혜 정부	2.8 %	3.2 %	2.6 %
기타	4.7 %	1.6 %	6.5 %

3 우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, 주52시간제 같은 「노동 규제」 46.3%

□ 응답 기업의 46.3%는 우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규제 분야로 '노동 규제' 선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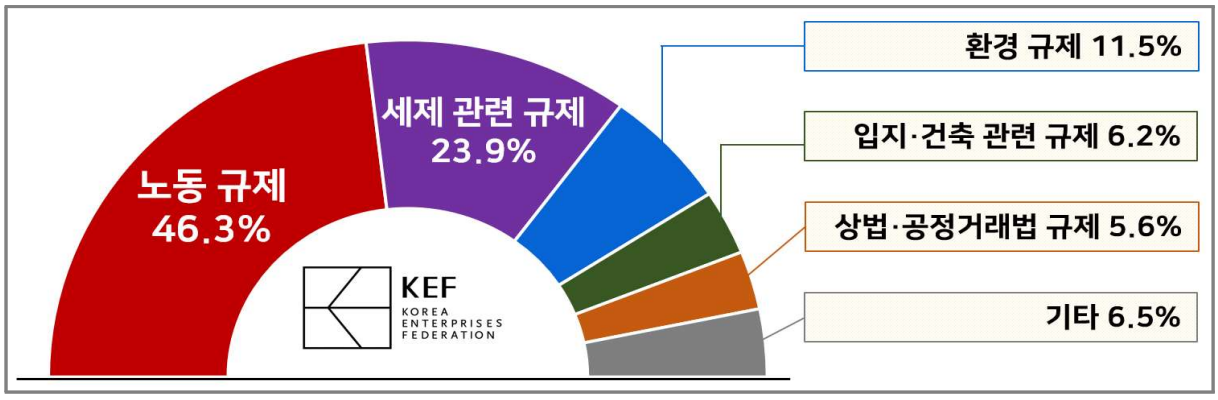
○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, 주52시간제 시행 등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노동 관련 규제들이 도입됨으로써 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

○ 그 밖에 '세제 관련 규제(높은 상속세 및 법인세)'(23.9%), '환경 규제'(11.5%), '입지·건축 관련 규제'(6.2%), '상법·공정거래법 규제(지배구조, 일감 몰아주기 등)'(5.6%) 순으로 응답

○ 특히, '노동 규제' 및 '세제 관련 규제'는 300인 미만 기업(이하 '중소기업')의 응답률이 300인 이상 기업(이하 '대기업')보다 더 높게 나타남.

[노동 규제] 중소기업 48.5% > 대기업 42.9%
[세제 관련 규제] 중소기업 26.5% > 대기업 19.8%

[그림 3.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규제 분야]



구 분	전 체	300인 이상	300인 미만
노동 규제(중대재해처벌법, 근로시간 등)	46.3 %	42.9 %	48.5 %
세제 관련 규제(높은 상속세 및 법인세)	23.9 %	19.8 %	26.5 %
환경 규제	11.5 %	14.3 %	9.7 %
입지·건축 관련 규제	6.2 %	7.1 %	5.6 %
상법·공정거래법 규제(지배구조, 일감몰아주기 등)	5.6 %	7.9 %	4.1 %
기 타	6.5 %	8.0 %	5.6 %

4 규제개선 제도 중 「규제개혁 신문고」 인지도 34.5%로 가장 높아

□ 기업들이 인지하고 있는 규제개선 제도를 조사(복수응답 허용)한 결과, '규제개혁 신문고'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34.5%로 가장 높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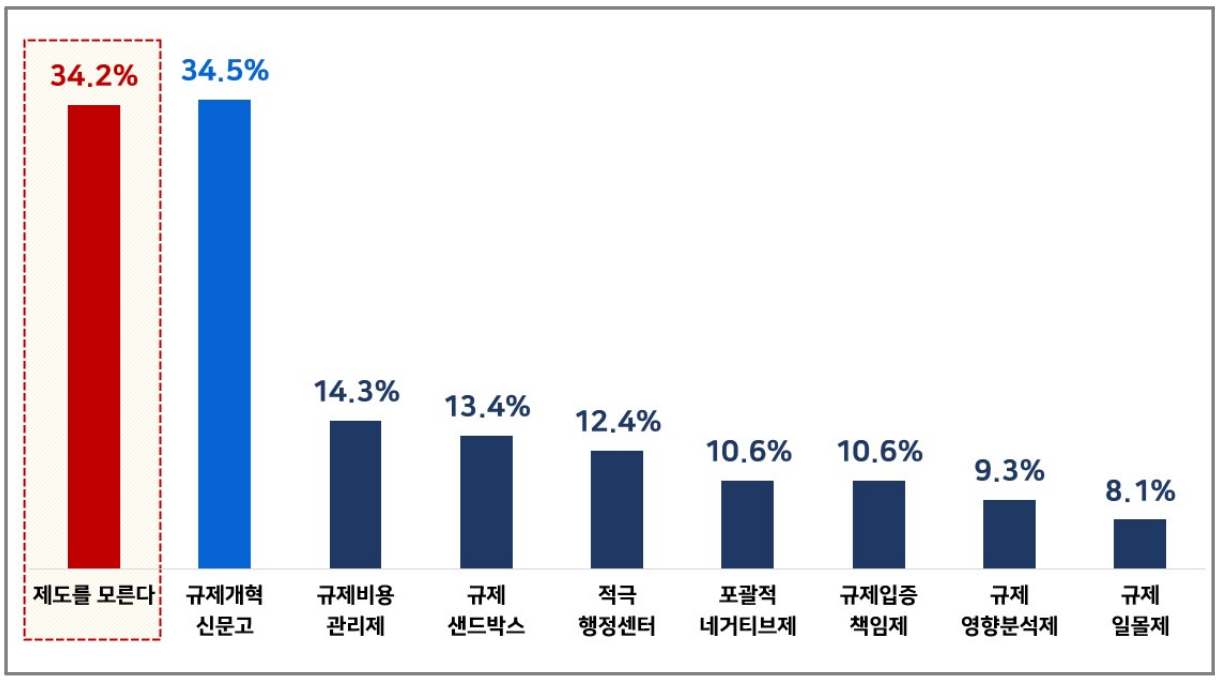
※ '규제개혁 신문고'는 국민 참여형 규제 건의 온라인 창구로 2014년 3월 도입 이후 2020년 말까지 총 21,709건(중복포함)의 규제 애로를 접수한 바 있음. 2020년에는 총 1,750건(중복포함) 중 303건 개선(자료 : 국무조정실, 2020 규제개혁백서)

○ 그 밖에 규제개선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15% 미만으로 낮은 수준

- 제도별로 알고 있다는 응답(복수응답 허용)은 '규제비용관리제'(14.3%), '규제 샌드박스'(13.4%), '적극행정센터'(12.4%), '포괄적 네거티브제'(10.6%), '규제입증책임제'(10.6%), '규제영향분석제'(9.3%), '규제일몰제'(8.1%) 순으로 집계

□ 한편, 다양한 규제개선 제도에 대하여 '제도를 모른다'는 응답 기업도 34.2%에 달하여 규제개선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풀이됨.

[그림 4. 기업이 알고 있는 규제개선 제도 (복수응답)]



5 응답 기업의 26.1% 「규제개혁 신문고」를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 향후 활용 의향이 있는 제도는 「규제개혁 신문고」 28.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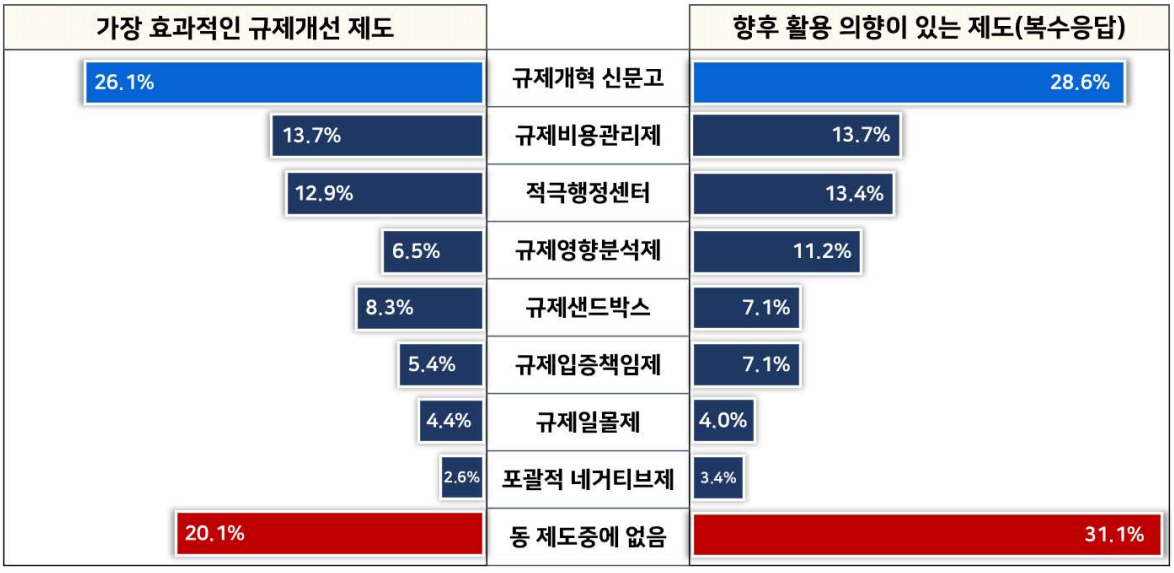
□ 규제개선 제도 중에서 응답 기업의 **26.1%**는 '규제개혁 신문고'를 가장 효과적이라고 선택한 반면, '효과적인 규제개선 제도가 없다'는 응답도 **20.1%**에 달함.

○ 그 외 효과적인 규제개선 제도는 '규제비용관리제'(13.7%), '적극행정센터'(12.9%), '규제 샌드박스'(8.3%), '규제영향분석제'(6.5%), '규제입증책임제'(5.4%), '규제일몰제'(4.4%), '포괄적 네거티브제'(2.6%) 순으로 응답

□ **향후 기업들이 활용할 의향이 있는 규제개선 제도**(복수응답 허용)**는 '규제개혁 신문고'가 28.6%로 가장 높게 조사됨. 반면, 제시된 제도들 모두 '활용할 의향이 없다'고 응답한 기업도 31.1%에 달해 제도별 효용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.**

○ '규제개혁 신문고' 다음으로 활용 의향이 있는 제도는 '규제비용관리제'(13.7%), '적극행정센터'(13.4%), '규제영향분석제'(11.2%), '규제 샌드박스'(7.1%), '규제입증책임제'(7.1%), '규제일몰제'(4.0%), '포괄적 네거티브제'(3.4%) 순으로 응답

[그림 5. 규제개선 제도 평가 및 향후 활용 의향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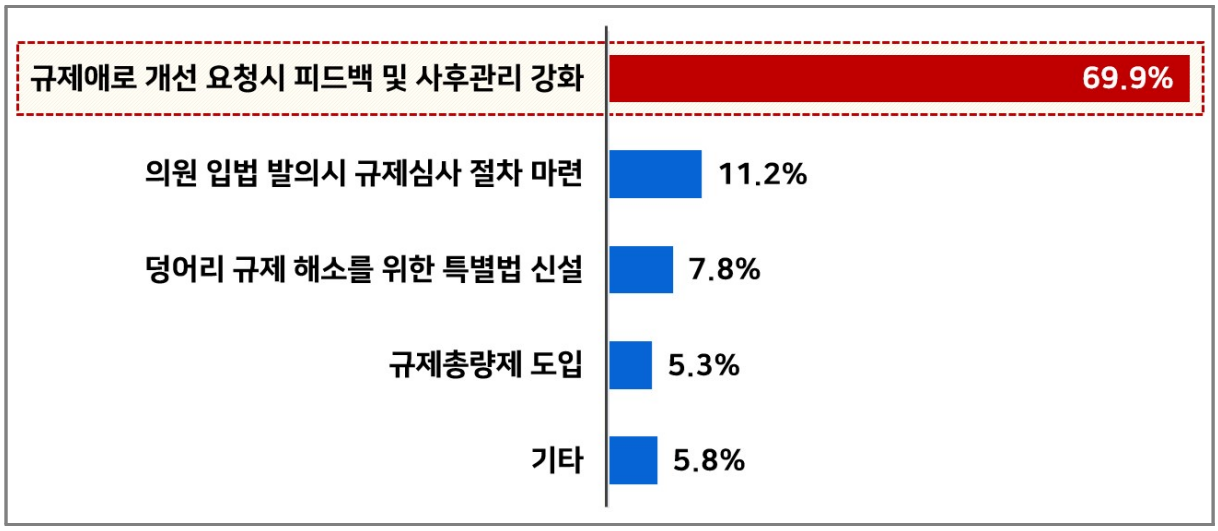
6 규제개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는 「기업의 규제 애로 개선 요청 시 피드백 및 사후관리 강화」 69.9%

□ 현 규제개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, '기업의 규제 애로 개선 요청 시 피드백 및 사후관리 강화'(69.9%)를 가장 높게 응답

> [현장의 목소리] "수년간 규제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낀 가장 큰 애로는 규제개선 건의 후 피드백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고, 중장기 검토나 불수용으로 분류된 후 미결된 규제가 애로를 유발한다는 점이다." ('21.5, 경총 회원사 인터뷰 中)

○ 그 밖에 '의원 입법 발의시 규제심사 절차 마련'(11.2%), '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신설'(7.8%), '규제총량제 도입'(5.3%) 순으로 조사됨.

[그림 6. 규제개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]



7 향후 규제환경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 77.3%
: 지금보다 개선 22.7% vs 지금과 유사하거나 악화 77.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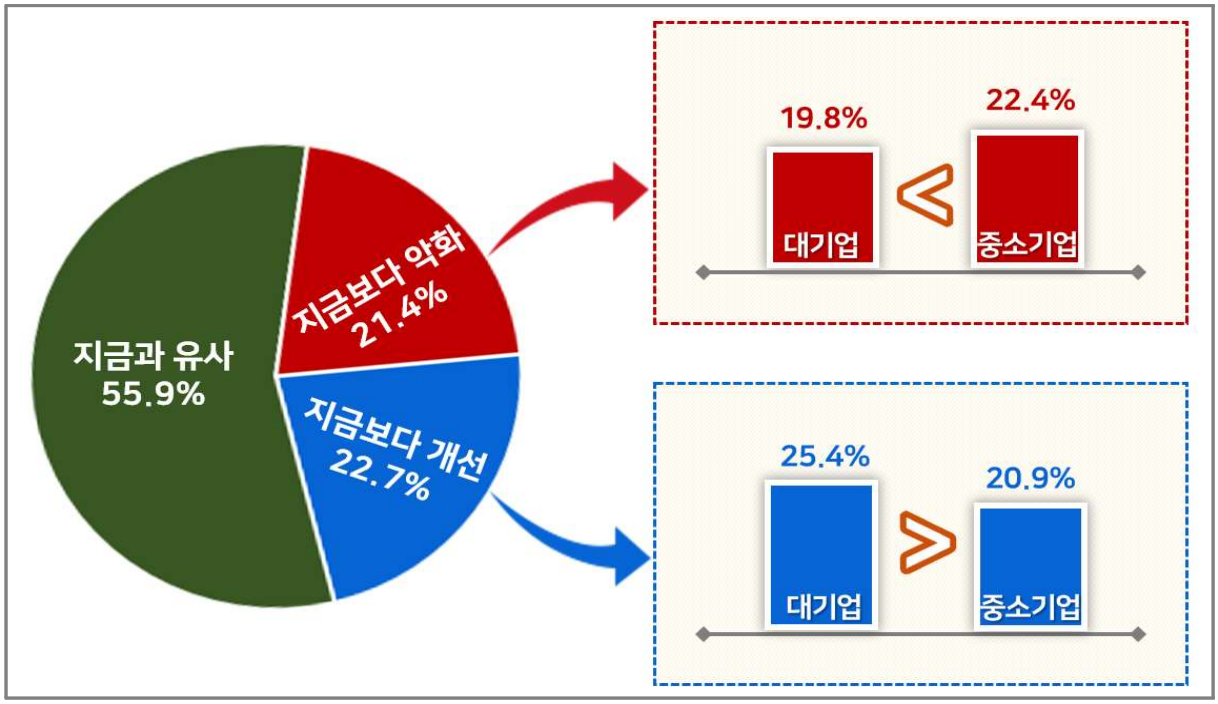
□ 기업을 둘러싼 규제환경에 대하여 '지금보다 개선될 것'으로 전망한 기업은 22.7%에 불과한 반면, '지금과 유사하거나 악화될 것'으로 전망한 기업은 77.3%로 향후 개선 가능성을 낮게 전망

○ 규모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향후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긍정적 전망(중소기업 20.9%, 대기업 25.4%)보다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(중소기업 79.1%, 대기업 74.6%)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.

○ 다만,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향후 규제환경을 더 부정적으로 전망함.

- 향후 규제환경이 '개선될 것'으로 응답한 비율은 대기업(25.4%)이 중소기업(20.9%)보다 4.5%p 높게 조사되었고, '악화될 것'이란 전망은 중소기업(22.4%)이 대기업(19.8%)보다 다소 높게 응답

[그림 7. 향후 기업을 둘러싼 규제환경에 대한 전망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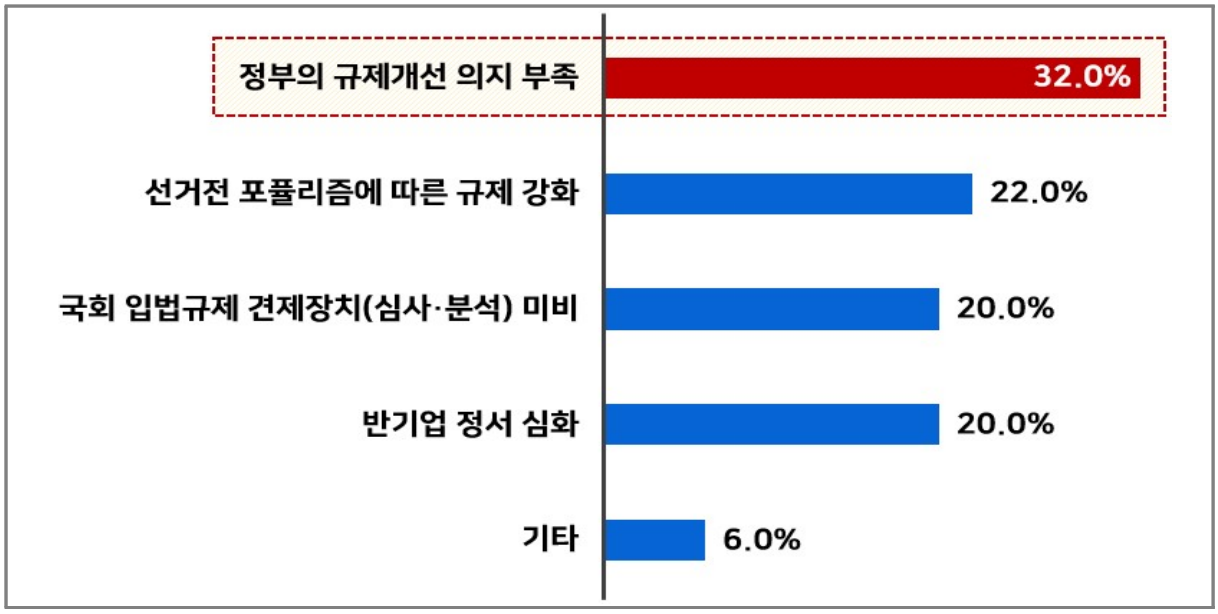


8 향후 규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가장 큰 이유는 「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부족」 32.0%

□ 향후 규제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'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부족'이 32.0%로 가장 높게 나타남.

○ 그 다음으로 '선거 전 포퓰리즘에 따른 규제 강화'(22.0%), '국회 입법 규제 견제장치(심사·분석) 미비'(20.0%), '반기업 정서 심화'(20.0%) 순으로 응답

[그림 8. 규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이유]



조 사 개 요

1. 조사목적

본 조사는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, 규제개선 제도의 효과성, 향후 규제환경 전망 등을 조사함으로써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.

2. 분석대상

전국 50인 이상 기업 중 설문에 응답한 322개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음.

※ 조사수행기관 : ㈜리서치앤리서치

3. 조사기간 : 2021년 5월 10일 ~ 5월 21일 < 12일간 >

4. 조사방법

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인터뷰(CATI), 이메일

5. 표본오차

95%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± 5.41% Point

6. 주요 조사항목

○ 현 정부 규제혁신 성과 및 규제개선 제도에 대한 평가

○ 규제개선이 시급한 분야, 향후 규제환경 전망 등

7. 회수업체 수

구분		회수업체 수
전체		322개사 (100.0%)
기업 규모별	300인 이상 기업	126개사 (39.1%)
	50~300인 미만 기업	196개사 (60.9%)